

한나라 '전대률' 오늘 담판짓나

여론조사 배제·1인1표제 계파 갈등

상임전국위·전국위 통과 험로 예고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 경선 규칙(룰)을 놓고 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예정된 의원총회,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가 최후의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대표 경선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1인2표제'를 '1인1표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전대 규칙(룰)은 100명 이내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1000명 이내로 꾸려진 전국위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확정될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확정한 규칙에 대해 해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줄세우기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

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6일 "비대위는 상임전국위원회에 올리는 신(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새로 추가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의총에서 영향력 있는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오전 8시30분 의원총회, 이어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가 확정한 경선 규칙에 대해 논의·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대위의 안에 대해 소장과 의원들이 반발이 적지 않아 최종 판문까지 협의가 예상된다. 특히 70

여명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가 전대 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비대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신·구주류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해신파는 비대위 의결사항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봉 상임전국위 의장은 6일 "비대위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도민인 '민본21'은 비대위의 여론조사 폐지 및 1인1표 도입에 대해 "전당대회를 계파·조직 과시대회, 조직 출세우기로 전락시킬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 표시했다.

'민본21' 정태근 의원은 "1인1표 방식은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을 전

제로 한 것인데 이를 통합 선출하기로 한 마당에 1인1표 방식을 채택한다면 당내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에서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2일 비대위 의결에 불참했던 비대위원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비대위 결정에 반기를 든 상태다.

하지만, 비대위 안이 이미 공고된 상태인 만큼 비대위 회의를 통한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의화 비대위원장이 연휴 기간 비대위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7일 상임전국위에 비대위의 최종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국위에 복수의 안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총에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을 잡은 뒤 전국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각당 대표 현총일 추념식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6회 현총일 추념식에서 각당 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추념사를 듣고 있다. 원쪽부터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변웅천 자유선진당 대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대표, 권한대행,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연합뉴스

이대통령 “전사자 유해 최후의 한 구까지 찾아야”

현총일 추념사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현총일 추념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故) 이전우 이등중사의 유해 빨굴 과정과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유해 미발굴자와 관련, “최후의 한 구까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세 청도 청년 고이천우 이등중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전장에 스스로 뛰어들었다. 흘어

먼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형 고이만우 하사가 입대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며 “아우는 장렬한 죽음마저 형의 뒤를 따랐지만 60여년 찬 서리 비바람 속에서 흘로 남겨져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머니는 두 아들을 가슴에 고이 묻고 1985년 세상을 달리했으나 정부는 시신마저 찾지 못해 애태우던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않았다”며 “마침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통해 지난해 강원도 백석산 능선에서 이전우 이등중사의 시신을 찾았다”고 말했다.

추념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현충원에서 열린 이 이등중사의 안장식에 참석, 유족 대표와 함께 직접 허리를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조금 전 이우는 형 곁에서 편안한 잠을 청했다. 죽음도 세

월도 사랑하는 흘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정든 고향집을 떠났던 두 형제의 애듯한 우애를 갈리놓지 못했다”며 이들 형제를 ‘호국의 형제’로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뒤 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미발굴자 13만여명 가운데 4만 여명의 유해가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찾아야 한다”면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에서도 찾고, 최후의 한 구까지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관행적으로 경찰·경찰과 경찰·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또 산재보험료는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장을 보여 부처 간 견해가 있는 상태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이 계류돼 있고 여야 정부는 지난 2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인권보호 관련 3가지 입법안 눈길

예술인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추진

한나라당이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가 예산과 법령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6일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해해 적용하고,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보험료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은 물론 부처 간 견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예술인 복지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실업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로당에 양곡·냉난방비 지원하자

한나라당 정책위는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의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 의원은 6일 “국가사업으로

구속 피고인 소환조사 금지법 만들자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6일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

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

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관행적으로 경찰·경찰과 경찰·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만 “신삼길,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긴밀한 관계’ 해명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 ECG 회장은 자신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자신과 신 명예회장이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되자 박 전 대표와의 전회통화에서 이같이 해명했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박 회장이 정치권에서 신 명예회장과의 로비설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상당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회장과 신 명예회장은 가끔 소주를 나누면서 세상 얘기를 하는 관계며 박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신 명예회장에게 소개시켰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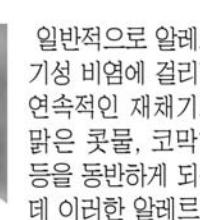
명예회장과 박지만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긴밀한 관계”라며 “박씨는 신 명예회장이 연행되기 두 시간 전 같이 식사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흡집 내고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면책특권을 방碍로 삼아 허위 사실이 범위가 된 3류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현웅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지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둘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성 비염 등 각종 고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 강화로 알레르기 성 고질병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냉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보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